

해외 국가연합 사례의 한반도 시사점

김일기 책임연구위원 | 채재병 책임연구위원
ikkim@inss.re.kr | chaejb@inss.re.kr

- I. 서론: 해외 국가연합 연구의 필요성
- II. 해외 국가연합의 형성 배경과 과정
- III. 해외 국가연합 형성 촉진요인과 분리요인
- IV. 결론: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국문 초록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과 더불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주목하여 해외의 국가연합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참고하여 향후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연합 사례 분석은 미국, 유럽연합,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의 3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국가연합을 거쳐 단일국가로 나아간 사례, 스웨덴-노르웨이는 양자적 통합의 사례, 유럽연합은 현존하는 대표적 국가연합 사례이다. 이들 사례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신뢰 구축과 동시에 남북연합에 관한 공동목표와 공동이익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연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과 함께 이 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 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많은 합의와 이행 제도를 마련하면서 남북연합으로 진화해야 한다. 넷째,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핵심어: 남북연합, 국가연합, 연방국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반도

I. 서론: 해외 국가연합 연구의 필요성

-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과 더불어 우리사회 내부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¹⁾
 -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18.4.27)과 「9·19 평양공동선언」(18.9.19)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통일에 합의
 -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적극 모색”²⁾을 주장함으로써 통일방안 논의 가능성 시사
- 남북한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논의 미진전
-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핵심 화두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평화와 함께 ‘통일’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한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와 도전들이 예상되는 불확실한 여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연구와 대책 마련이 요구
- 남북연합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장치³⁾이자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를 의미
 -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 국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단절적 도약의 관점이 아니라 점진적 심화의 관점에서 설정

1) 이무철, “‘진정한 광복’을 향한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20 (2020); 통일부·통일연구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의의와 과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학술회의 (2019년 9월 9일) 참조.

2)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3) 남북연합을 이룬 시점에서 보는 연구는 구갑우, “평창 임시 평화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동향과 전망』 제103호 (2018), pp. 32-62 참조.

- 본 전략보고는 해외의 국가연합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향후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 전세계 195개국의 과거와 현재 국가연합 사례들 중에서 미국, 유럽연합,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의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 ※ 국가연합 사례는 △네덜란드(1581-1795) △독일(1815-1866) △미국(1781-1787) △세르비아-몬테네그로(2003-2006)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왕국(1814-1905) △스위스(14세기-1798) 등 과거 사례와 △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현존사례가 존재⁴⁾
 - 미국은 13개 주 ⇒ 국가연합 ⇒ 단일국가(연방국가)로 나아간 사례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합 이후의 단일국가로의 통합 방향성과 유사
 - 스웨덴-노르웨이는 두 개의 국가가 연합을 구성한 양자적 통합의 대표적 사례
 - 유럽연합은 현존하는 국가연합 중 성공적으로 국가연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적 통합의 대표 사례

II. 해외 국가연합의 형성 배경과 과정

1. 미국: 13개 주 ⇒ 국가연합 ⇒ 연방국가

가. 배경

- 미국의 국가연합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 주들이 독립전쟁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 과정에서 시작

4) 김일기 외,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가연합·연방 등 사례를 통한 남북한 통일과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9), p. 383.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한 13개 주들이 통일된 활동을 위해 새로운 통치 구조를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연합을 형성

나. 과정⁵⁾

(1) 영국에 대항하는 식민지들의 공동저항과 독립선언

-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 승리 이후 막대한 전비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식민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식민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동저항을 시작
- 그 결과, 식민지들은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차 대륙회의를 통해 영국 국왕의 권위에 대한 반대와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식민지 권리장전」을 선언
- 1775년 5월 개최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식민지들은 대륙연합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임명하였으며,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 채택을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

(2) 「연합규약」 채택과 국가연합 형성

-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13개 주들은 독립 이후의 새로운 통치구조를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추진
- 대륙회의는 1777년 11월 「국가연합 및 항구적 동맹에 관한 규약들」을 승인하였으며,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781년 3월 모든 주들의 비준을 통해 국가기본법의 효력을 발휘
- 「연합규약」의 비준과 함께 13개 식민지가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들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국가연합체제를 형성

5) 미국의 국가연합 형성과정은 신정현,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 2004), pp. 28-91; 손병권·이옥연,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 헌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4집 제4호 (2004), pp. 319-339 참조.

(3)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 전환

- 국가연합 형성 이후 각 주들은 △연합의회의 대표권과 주의 분담금 불일치 △주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어려운 무력폭동과 만성적자 발생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
 - 각 주들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공동의 기구에 더 많은 통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합규약」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
- 1787년 5월 헌법제정회의에서 「연합규약」을 폐기하고 「연방헌법」을 채택하면서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 전환

2. 유럽연합: 유럽석탄공동체(ECSC) ⇒ 유럽공동체(EC) ⇒ 국가연합(EU)

가.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 내부에서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핵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초국가적 기구의 필요성 증가
- 석탄·철강의 공동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통합을 통해 ‘하나의 유럽’ 건설을 추진

나. 과정⁶⁾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은 1950년 5월 ‘슈망 선언’을 통해 유럽 석탄·철강의 생산·판매를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고 제안

6) 유럽연합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 『유럽연합 개황』(서울: 늘봄플러스, 2015), pp. 3-32; 정성장, “유럽연합의 사례,”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서울: 한울, 2004), pp. 147-178 참조.

- 1952년 8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6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출범

(2)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ECSC 6개국은 경제협력을 산업 전분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및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결성에 합의하고 1957년 3월 「로마 조약」을 체결
- EEC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적으로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산업·사회·재무·재정분야 공동정책 추진
 - EURATOM은 에너지 공동시장(특히 원자력)의 창설을 목적으로 핵 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과 핵에너지의 안전 등을 추진했으나 군사 분야와의 연계성 미비 등으로 EEC에 비해 미진전

(3) 유럽공동체(EC)로 통합

- ECSC, EEC, EURATOM은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와 단일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를 통해 사실상의 단일공동체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로 부름
 - ECSC, EEC, EURATOM은 유사 기능 및 성격의 기구들을 통합하여 △이사회(Council) △집행위원회(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으로 단일화
- EC 회원국들은 인적·물적·자본·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통한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단일유럽 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를 1986년 2월 체결(1987.7.1 발효)하고 1993년 1월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

(4) 유럽연합(EU)의 출범

- EC 회원국들은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을 위해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체결한 이후 1993년 11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결성

- EU는 △경제적 통합의 완성 △공동외교안보정책 도입 △내무·사법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추진
- EU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5개 기관이 핵심 기구이며,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음부즈맨 △유럽투자은행 등이 핵심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3.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노르웨이 양도 ⇒ 국가연합 ⇒ 분리

가. 배경

-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 1809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핀란드를 러시아에 뺏긴 이후,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르웨이 합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포기하였으며, 전승국이었던 스웨덴이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양도받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왕국 형성
 - 노르웨이는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1536-1814)의 한 지방으로 속국 같은 지위로 존재

나. 과정⁷⁾

(1) 반(反)나폴레옹 동맹국들의 승리와 스웨덴의 덴마크 침공

- 1813년 라이프찌히 전투(Battle of Leipzig)에서 반(反)나폴레옹 동맹국들이 승리하면서 스웨덴은 노르웨이 양도를 압박하기 위해 외교적 압력과 함께 덴마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
 - 스웨덴의 동맹국들(영국, 프러시아)은 1813년 3월 「스톡홀름 조약(Treaty of Stockholm)」을 통해 전쟁의 이권으로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

7)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김인춘, “통합과 분리: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성립과 해체,”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pp. 179-227 참조.

- 덴마크 왕은 스웨덴의 침공 직후 바로 협상을 요청했고, 1814년 1월 「킬 조약(Treaty of Kiel)」⁸⁾에 따라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양도

(2) 스웨덴-노르웨이 연합국가의 출범

-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에서 지배계층의 다수가 덴마크 출신이었던 노르웨이는 1814년 5월 스웨덴 양도를 거부하고 노르웨이의 독립을 선포
 - 스웨덴은 외교적 압력과 함께 1814년 7월 노르웨이를 공격, 14일간의 전쟁 후 협상 시작
- 협상의 결과, 노르웨이는 스웨덴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연합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모스 협정(Treaty of Moss)」 체결
 - 모스 협정의 결과 노르웨이 왕국 해체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왕국 출범
-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은 독립적인 두 나라가 같은 군주를 갖는 연합관계, 즉 동군연합(personal union)의 성격으로 대외적 공동안보와 외교 이외에는 노르웨이 내각이 자치권을 보유

(3) 스웨덴-노르웨이 연합국가의 분리

- 19세기말 노르웨이의 △정치적 민주주의 달성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 등장 등은 연합 탈퇴, 즉 노르웨이의 독립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으로 전환
- 1895~1905년 동안 연합체제는 폭력적 대결, 군사적 무장, 협상, 시위, 격화된 여론 등으로 혼돈상태에 빠졌으며, 1905년 6월 노르웨이 의회가 스웨덴 국왕을 거부하는 즉, 스웨덴과의 연합체제를 해체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동년 9월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분리

8) 「킬 조약」은 1814년 덴마크, 스웨덴, 영국 3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양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III. 해외 국가연합 형성 촉진요인과 분리요인

1. 미국

가. 국가연합 촉진요인

- (식민지 독립의 공동목표 보유) 미국의 13개 식민지는 대영 독립투쟁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국가연합에 동의
- (식민지들의 공통된 사상적 기반) 13개 식민지는 근대 자연법사상과 자유주의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정부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이라는 공통의 사상적 기반을 보유하여 국가연합 형성에 유리
- (식민지들의 독립적 정체성) 미국은 독립 초기에 식민지 간의 △깊은 불신의 문화 △중앙권력 팽창에 대한 두려움 △미국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미성숙 △각 주의 고유한 정체성 등에 따라 국가형태로 연방제보다는 국가연합제를 채택

나. 국가연합에서 연방국가로의 전환요인

- (초국가적 기구의 미형성) 초국가적 기구로는 회의 기관인 연합의회만을 가졌을 뿐 집행기구나 사법기관들을 보유하지 못해 불완전한 정부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책 집행력 부족 현상 만연
- (연합의회의 주에 대한 통제권 미비) 미국의 국가연합은 연합의회의 정책과 법안 실행의 책임을 각 주가 가지고 있어 주의 정책 불이행에 대한 연합차원에서의 제재 권한 부재
- (연합의회의 재정적 무능력) 연합의회는 과세권을 갖지 못했으며 각 주들이 분담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연합기구 권한 증가 요구 확산) 주 정부의 능력으로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각 주들은 연합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합규약」 개정을 요구

2. 유럽연합: 국가연합 촉진요인

- (회원국들의 공동목표 보유)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예방과 평화의 실현 → 공동의 경제번영 → 정치통합체라는 공동목표를 향한 방향성을 공유
- (평화적 합의와 조약체결을 통한 통합과정)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이 합의에 따른 조약체결을 통해 평화적·점진적으로 진행
 - ※ 특히 유럽의 앙숙이자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우호와 협력을 약속한 「엘리제 조약 (Elysee Treaty, 1963)」 체결로 유럽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⁹⁾
- (초국가적 기구의 보유) EU는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 개별 회원국들의 이익을 초월한 초국가적 기구를 보유
 - 초국가적 기구의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부로부터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며, 소속 국가의 대표가 아닌 EU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표

3.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가. 국가연합 촉진요인

- (흡수통합에서 대등통합으로의 전환) 1814년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사실상 무력 합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흡수통합에서 출발하였으나, 1815년의 「연합조약」 체결로 대등통합의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노르웨이의 연합체제 참여 유인요인으로 작용

9)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정책에 대해서는 오창룡, “역사적 화해와 지역통합: 독일·프랑스 화해정책,” 이재승 외,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참조.

- (국가연합에 대한 동상이몽)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수립 당시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통합, 노르웨이는 주권국가로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합조약을 체결

나. 국가연합 분리요인

- (두 나라의 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에 대해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킬 조약」에 의해 양도받은 준독립 상태의 국가로 간주한 반면 노르웨이는 양자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인식한 것이 연합기간 내내 논란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 (경제통합 이후 정치통합으로 미진행) 화폐통합 등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에도 불구하고 경제 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국가연합의 분리요인으로 작용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독립요구 증가) 노르웨이의 의회주의와 자유주의 등 민주주의 제도발전이 스웨덴의 보수주의와 권위적인 군주제와 충돌하면서 독립요구 증가

IV. 결론: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목표와 공동이익 창출 필요

- 미국의 13개 주는 식민지 독립전쟁을 통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유럽연합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 정치적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동목표 추구하고 이익 공유를 통해 국가연합을 형성
 - 반면,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은 양 구성원의 국가연합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공동의 목표와 이익 창출에 실패하면서 국가연합의 해체로 귀결

-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과 동시에 남북연합에 대한 공동목표와 이익창출 등 공동비전의 창출이 필요
 -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가치에는 합의하였으며, 이를 넘어 한반도 미래 청사진과 공동의 이익 창출에 대한 남북 간 공유가 필요

2.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과 실질적 권한 부여

- 미국의 국가연합은 초국가적 기구 창설에 실패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을 받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어 연합체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 증가
 -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역시 초국가적 기구를 창설하기보다 외교안보에 대한 권한은 스웨덴이 갖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독자성을 존중함으로써 정치 통합이 경제통합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발생
 - 반면,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초국가적 기구의 활발한 활동으로 통합이 진전
- 남북연합은 양자 간 연합이기 때문에 초국가적 기구 설치가 다자 간 연합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기구로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남북평의회(대의기구) △공동사무처(지원기구)를 두고 있으나 협의기구에 그치고 있어, 통합의 속도와 효과를 고려한다면 남북연합도 초국가적 기구 설치가 필요
 - 초국가적 기구는 남북한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 한반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남북연합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심화하는 기능 수행

3. 다양한 대화협의체를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진화

- 미국의 국가연합은 독립전쟁 수행과정에서 13개 주가 모여 대륙회의를 구성한 이후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
 - 유럽연합 역시 EU 정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조약체결을 통해 국가연합을 출범 시키고 통합의 심화로 나아감

- 남북한도 남북연합 형성 이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협의체들을 마련할 필요성
 -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구성 필요
 - 이들 협의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합의와 이행 제도를 마련하면서 남북연합으로 진화

4.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통합과 정치통합의 병행추진

-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문화 통합과 정치통합으로 나아갔으며, 이후 각 분야별 통합을 병행하여 국가연합 체제가 심화
 - EU 역시 외교안보 분야의 통합이 경제분야의 통합을 따라가지 못해 정치통합이 경제 분야에서 통합보다 어렵다는 것을 시사
 -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의 경우 경제통합은 화폐동맹까지 진전되는 등 심화되었으나, 정치통합의 미진전으로 연합국가의 분리가 초래됨
- 남북한은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심화하되 사회문화 통합과 정치통합을 병행하는 방식을 결합
 -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의 통합이 결합될 때 통합의 안정성 확보 용이
 - 남북연합의 외교안보 분야 통합은 성급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차분하게 추진하는 자세 필요

참고문헌

- 구갑우. “평창 임시 평화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동향과 전망』 제103호 (2018).
- 김인춘. “통합과 분리: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성립과 해체.”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 김일기 외.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가연합·연방 등 사례를 통한 남북한 통일과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9).
- 손병권·이옥연.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 헌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제4호 (2004).
- 신정현. “미국의 국가연합 사례.”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 2004.
- 오창룡. “역사적 화해와 지역통합: 독일·프랑스 화해정책.” 이재승 외.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 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외교부. 『세계각국편람』. 서울: 외교부, 2017.
-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 『유럽연합 개황』. 서울: 늘품플러스, 2015.
- 이무철. “‘진정한 광복’을 향한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20 (2020).
- 정성장. “유럽연합의 사례.”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 2004.
- 통일부·통일연구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의의와 과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기념학술회의 (2019년 9월 9일).

Abstract

Cases of Overseas Confeder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l-Gi Kim

Jae-Byung Cha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port analyzes the overseas confederations' cases and presents what we should consider in forming the Korean Commonwealth in the future. The overseas confederations' cases include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Sweden-Norway Union. The United States is a case of moving toward a single country. Sweden-Norway is a bilateral integration case, and the European Union is a representative case of existing confederation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forming the Korean Commonwealth derived from these cas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create common goals and interests for the Korean Commonwealth. Second, to secure a stable and sustainable Korean Commonwealth, transnational organizations with practical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prepare numerous agreements and implementation institutions through various consultative bodies. Lastly,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should be promoted in parallel, focusing on economic integration.

Keywords: Korean Commonwealth, confederation of states, federal stat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Korean Peninsula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0. No. 10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